

KINU Insight

2019
No.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조한범
박주화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통일정책연구소 실장

조한범 통일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주화 통일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 참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요약	1
I. 배경	4
II. 현 한반도 정세 평가	5
가. 남북관계	5
나. 동북아 정세	7
III.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평가	9
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은 무엇인가?	9
나. 최근 북한의 식량지원 거부의 배경은 무엇인가?	10
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무엇인가? 북한이 ‘先북미-後남북’ 기조를 보이면서 ‘남북주도 평화’ 노선을 압박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0
IV.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비핵화 정책에 대한 평가	12
가. ‘제재 틀 안에서’ 남북협력 사업은 가능한가?	12
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가능한 구상인가? 현 상황에서 남북협력이 가능한 사업은 무엇인가?	12
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는?	13
V. 우리 정부의 대책	15
가. ‘핵이 있는 평화’ 기간에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한미군사훈련,’ ‘군 전력 현대화’가 ‘안보 딜레마’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5
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15
다.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17

요약

■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 평가

-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요인은 △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필요성 및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유지 △ 한국정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 △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으로 최소한 북한문제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
- 반면 남북관계에 있어 위협요인은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도출 실패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신뢰 훼손 △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각각의 군사훈련은 쌍중단의 사실상 파기로 악화 △ 한미동맹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남북관계의 본질과 한미 간 이익 차이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 현재 동북아 정세는 악화일로에 있으며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과 북미대화 기조 유지는 기회요인으로 평가
- 반면 동북아 정세의 위협요인은 △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동북아 역학구도의 불확실성 강화 △ 일본의 보통국가화 시도, 단기적으로 한일 갈등은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

■ 북한의 의도 분석

-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대내적으로 군부의 소외감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측면과 대외적으로 재래식 무기의 기술적 완성도를 과시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한 포석 및 미국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협상전술로 분석
-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북한의 대남 전략변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

○ 북한의 식량지원 거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더 적극적인 카드를 유도하는 압박으로 분석, 또한 식량지원을 받아들이는 경우 미사일 실험의 파급력 및 한국의 군사훈련 및 국방중기계획 문제의 쟁점화에 부정적 영향 우려한 것으로 평가

○ 북한의 소위 '先북미-後남북' 기조는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가한 것이 원인, 반면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전술적 변화일 가능성 존재

■ 남북협력사업 및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

○ 현재의 '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의미 있는 남북협력사업은 매우 어렵다고 분석되며, 제재의 내용, 주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제재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

○ 단, 인도주의 면제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국제적 공감대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금강산 관광의 형식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고려

○ 북미 비핵화 협상의 쟁점들이 뚜렷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크지만 쟁점의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상호 신뢰구축 과정 필요

■ 정책적 고려사항

○ 비핵화 협상과정, 즉 '핵이 있는 평화' 기간에 안보딜레마 방지를 위해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을 적극 제기해야 하며, 비핵화 실행 국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관련한 과감한 조치 고려 필요

○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추수전략 vs. 선도전략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부-비정부 대화채널을 적극 활용

- 또한 올 가을 국제 외교무대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후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계기를 조성
- 비핵화 진전을 위해 초기 진전 상황을 과감하게 활용하는 선도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 국내외에 한반도 문제 공감노력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통한 우회적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노력 강화
- 과거처럼 한미동맹에 편승한 외교정책만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외교적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중장기적 외교전략 필요
- 특정 이슈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북한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북한의 태도가 중요해지는 상황을 타개할 필요

I 배경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실패 후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황
 -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에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줄다리기가 양상 지속¹⁾
 - 지난 9월까지의 남북관계도 한미 합동군사훈련,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 지체 국면²⁾
- 한반도 정세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현 국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 필요
 - 현 상황에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평가
 - 북한의 의도 분석
 - 기존 정책 리뷰
 - 정책 방안 제시
- 통일연구원과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한 정책 방안 도출³⁾
 - 통일연구원에서는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들과 함께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
 - 전문가들은 크게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 북한의 의도, 남북협력사업 및 비핵화 협상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방안 제시
- 본 보고서에서 전문가 토론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

-
- 1)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 1부상은 10월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미 쌍방은 오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2) 합동참모본부는 10월 2일 오전 7시 11분경 “강원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 3)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기광서 (조선대학교), 왕선택 (YTN),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진희관 (인제대학교),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상 가나다 순

II 현 한반도 정세 평가

가. 남북관계

(1) 기회요인

-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필요성 및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채택
 -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발전 의지 확고
 - 박봉주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재룡 내각총리의 꾸준한 경제행보
 - 핵능력 확보를 통한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경제발전이 뒷받침되어야 체제지속 가능

- 한국정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
 -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실험, 수위 높은 대남 비난에 인내하는 태도 견지
 -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공동번영 추구
 -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추진

-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
 - 북미 협상의 모멘텀 지속
 - Top-down 접근을 통한 북미 실무협상 견인 가능성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교체

- 북중관계 진전이 북한의 핵이나 ICBM 도발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동

(2) 위협요인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도출 실패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신뢰 훼손
 - 남북관계를 북미회담의 종속변수로 평가절하
 - 통일전선부 대신 외무성이 북미협상 전면에 등장
 - 통전부가 한국정부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비판 가능
 - 외무성은 한국과의 협력보다는 압박을 통한 국면 타개 선호
 -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내부세력(군부 등)의 입지 강화 가능성

-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가능성
 - 친서외교 이상의 성과 도출 실패
 - 비핵화의 정의, 과정, 상응조치 등에 있어 북미 간 현격한 입장 차이
 - 북미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 대선 전까지 교착상황 장기화 가능성

-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각각의 군사훈련 실시는 쌍중단의 사실상 파기로 인식 가능
 - 교착이 장기화되면 핵과 미사일로 억제 능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북한이 도발로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나설 가능성 존재
 - 북한의 미사일 시험, 한미연합훈련, 국방중기계획(2020~2024)에 따른 한국의 군사력 증강(F-35A기 도입, 경항공모함 추진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리한 요구(중거리 미사일 배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등 남북관계의 부정적 환경 강화
 - 국내적으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증가

- 한미동맹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남북관계의 본질과 한미 간 이익 차이
 -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와 난항으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심화
 -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한국의 한반도정책 간 간극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불확실성 증가
 -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북미협상 지체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북협상을 가속화하고 대북제재의 해제와 같은 일정한 양보를 북한에 제공 가능성

나. 동북아 정세

(1) 기회요인

- 현재 동북아 정세는 악화일로에 있으며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 거의 유일한 기회요인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중단은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발언

(2) 위협요인

-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 미중 전략경쟁으로 상징되는 강대국들 간 자국중심주의적 경쟁 국면 지속
 -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이 사라진 이른바 G-0 상황에서 국가들 간의 무한경쟁은 불가피
 - 당분간 미중 협조체제나 다자안보협력 모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동북아 역학구도 불확실성 강화
 - 군비경쟁, 가치사슬의 재구축, 이념 및 가치 충돌 등 다차원적인 경쟁과 갈등 지속
 - INF 동아시아 배치 문제, 남/동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문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이 북핵문제와 연관된다면 한국의 전략공간 축소는 불가피
- 일본의 보통국가화, 단기적으로 한일 갈등은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
 - 일본은 한국과의 외교 충돌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데 집중(예: 한미일

공조를 한국이 훼손)

- 일본의 무역보복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및 태평양 지역 질서 변화를 견제
-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과장,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폄훼하는 부정적 공공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III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평가

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은 무엇인가?

- 대내적으로는 2018년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군부를 다독이고, 급격한 비핵화 전환에 따른 북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 의도
- 북미협상 교착기에 전술무기의 기술적 완성도 제고를 통해 군사적 억지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비한 포석으로도 이해 가능
 - 신형 단거리미사일의 신뢰성 확보와 새로운 갈등 국면에서 군사적 억제능력 과시
 -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 핵능력이 감소하는 경우 재래식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유력한 방식
-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
 -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이행 지체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전가
 - 한미연합군사훈련, F-35A기 도입,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 등 한국의 국방중기계획 강화에 대한 반발
-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긴장감을 고조시켜서 미국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
 -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압박
 - 이는 북미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화 의지의 역표현으로 해석 가능
 - 이외에 '새로운 길' 선택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도 기능

- 북한의 대남 전략변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 존재
 -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중단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의 대남 '무시' 경향 강화
 - 심각한 한일 갈등 상황에서 남측 정부에 대한 극심한 비난은 이례적
 - 민족이익보다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전략의 강화 여부 주시 필요

나. 최근 북한의 식량지원 거부의 배경은 무엇인가?

- 한국정부에 대한 불쾌감 표출
 - 한국정부의 시혜적인 태도에 대한 불쾌감을 표명
 -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관계의 매듭을 풀려는 시도에 대한 거부
- 한국정부에 더 적극적인 카드를 제시하도록 압박
 - 북한은 2015년 초부터 남측 민간단체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거부
 - 최근 식량부족 현상이 심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분석
 - 상대적으로 남측의 과감한 경제교류협력, 대기업의 대북투자에 관심
 - 남측의 식량지원은 실효성 낮고 자존심만 구기는 일로 인식한다고 판단
- 자신들의 미사일 실험의 파급력 그리고 한국의 군사훈련 및 국방중기계획 문제의 쟁점화에 부정적 영향 우려

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무엇인가? 북한이 '先북미-後남북' 기조를 보이면서 '남북주도 평화' 노선을 압박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북한은 한국정부의 중재자 역할 부정
 - 지난 3월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상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될 수 없다고 발언

-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지 말고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발언

-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한 불신 증가가 가장 큰 원인
 -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실패는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를 설득할 역량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

- 반면 북한이 중재자 역할에 조소를 보내는 것, 선미후남 기조는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전술적 판단으로 분석 가능
 - 남측이 자신의 편에 서서 미국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하였지만 남측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에 불만을 표출
 - 대미·대남관계가 동시에 개선될 경우, 기존 체제유지 질서의 균열 가능성 경계
 - 미국과 대화를 준비·진행하는 동안 한국을 경계함으로써 내부 정책결정기능의 긴장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 특히 지난 정부 10년간 대립 기조를 유지해온 대남부서가 유화 분위기로 전환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북한의 ‘통미배남,’ ‘선미후남’의 기조에 대해 한국정부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이 가능
 - 남북관계가 당분간 악화되더라도 북미대화의 진전을 기다리는 전술적 인내 유지, 이 경우에는 북미관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전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
 - 북미관계의 빠른 진전이 어려울 경우 북미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혹은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능동적 시도 여부 판단

IV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비핵화 정책에 대한 평가

가. '제재 틀 안에서' 남북협력 사업은 가능한가?

- 매우 제한적이나 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판단
 - 북한 영유어나 임산부,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 인적교류, 사회문화교류, 관광 등이 가능
- 제재의 내용, 주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제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
 - 유엔제재와 미국의 법, 행정명령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를 시급히 찾아내고 정비할 필요
- 하지만 제재 틀 안에서 '의미'있는 남북협력은 불가능
 - 남북 접촉선을 유지하되 북·미 협상 성과도출에 주력할 필요
 - 제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북한과의 교감과 소통이 중요

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가능한 구상인가? 현 상황에서 남북협력이 가능한 사업은 무엇인가?

- 북핵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희박
 - 전 정부에서 개성공단에 투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한계
 - 금강산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구체적인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가능, 하지만 대북제재 틀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에 어려움
 -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의 일환으로 고려 가능

- 인도주의 면제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국제적 공감대 확보 노력 필요
 - 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현물 제공과 기술 및 교육 협력 추진
 - 특히 인적교류를 통해 제재 해제 이후 추진할 협력사업을 사전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
- 금강산관광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 고려
 - 크루즈 관광과의 연계 등을 고려
 - 북한의 관광회사(고려투어스)에 참여하는 형태 고려

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는?

-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크지만 지난해 9월 이후 불만족스러운 상황
 -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핵실험 중단, ICBM 시험 중단, 한미는 한미연합군사 훈련 축소
 - 비핵화 개념에 대한 포괄적 합의, 비핵화 방법, 비핵화 상응조치 등에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쟁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는 점은 진전
 - 북한이 제시한 카드를 활용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
- 쟁점들이 뚜렷해진 반면 쟁점의 해결은 용이하지 않은 상황
 - 비핵화 협상 초기 북미 간 영변 핵시설 철폐와 부분적 대북제재 해제에 동의한 바 있으므로 새로운 합의는 이 틀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즉 '하노이+ α '로의 진전이 필요: 북한은 '영변+ α ', 미국은 단계적 접근 수용(제재 완화 포함)
-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상호 신뢰구축 과정 필요
 - 비핵화는 물리적인 비핵화만이 아니라,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성과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즉 신고단계, 검증단계, 사후단계에서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여부에 대해 논란 지속
 - 결국 물리적 비핵화와 함께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모색이 중요하며 신뢰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상호(외교)관계 개선과 경제적 의존성 증대(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필요
- 단기적으로는 2019년 이내에 어떠한 합의와 성과를 도출하여, 이후까지 비핵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
- 북한이 비핵화 최종단계를 보다 분명히 한다면, 초기단계 이행조치로서 핵동결 대 북미 연락사무소 등 관계개선 조치 교환 추진

V 우리 정부의 대책

가. '핵이 있는 평화' 기간에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한미군사훈련,' '군 전력 현대화'가 '안보 딜레마'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적극 제기할 필요
 - 남측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실험에 대해 우려 표명, 북측은 남한의 F-35A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비난
 - 우리가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면, 북한의 통상적인 훈련은 어느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 무엇이 도발인지 등에 대한 남북 간, 내부 합의도 필요
 - 안보 패러다임을 남북의 대치에서 주변국 대치로 전환에 합의하고, 남북 군비통제 하에서 상호 유지하는 군사력 규모와 범위 논의
 - 북의 핵폐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핵억제를 위한 한미군사협력의 필요성을 북한에게 설득
 - 군 전력 현대화에서 대북 공격무기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
- 비핵화 실행 국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관련한 과감한 조치에 대한 고려 필요
 - 현재 협상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쌍중단 국면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실행 국면으로 이동
 - 이러한 전환이 없으면 남북 간, 국내 갈등 요인으로 작동
-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가 각각 주도권을 쥐고 추진하는 동시에 청와대가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북정책 공간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방안 고려

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 추수전략인가 선도전략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

- 현재는 선도전략의 실행을 위한 카드가 부족하며 미 국무부의 비자정책 변경으로 관광협력 역시 타격을 받은 상황
 -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 교착, 결렬 상황에 대한 대비책 필요
- 선도전략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필요
-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서 남북관계를 계속 바라볼 경우 남북관계를 북미회담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
 - 북한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모습을 각인해야만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가능
 - 남북의 공통적 이익이 동맹의 이익과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하되, 때로는 남북의 공통적 이익이 동맹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대내외적인 인식 기반을 확충 필요
- 신뢰할 수 있는 당국-비당국 대화채널 적극 활용
- 당국 간 채널인 통일부 등 관계부처의 역량 집중
 - 비당국 간 채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여가 필요
- 올 가을 외교무대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여를 적극 모색
 - 북한은 아세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
 - 10월 15일 예정인 월드컵 축구 평양 예선전을 적극 활용할 필요
-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전 단계인 사실상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북한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관철에 남북관계 필수
 - 인도적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 체육, 관광, 종교, 교육 분야에서 인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프로그램 추진

○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후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계기 만들 필요

다.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 초기 진전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도전략 고려 필요

- 병력을 동원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불가역적 중단
- 제재 완화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한 남북협력 추진

○ 비핵화 진전을 위해 북한과 미국에 비핵화 방안 합의를 위한 설득 지속

- 미국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최대한 공급
- 남북 최고지도자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국내외의 한반도 문제 공감노력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 (공공외교) 공식-비공식 외교적 노력 필요. 1.5트랙과 2트랙 등을 통한 주변국과의 한반도문제 공감노력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 (국민적 공감대 확산) 사회적 토론을 확대하는 등, 보수-진보세력 모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 마련에 주력할 필요
- (미디어 소통강화) 한반도 상황의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디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인들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좋은 인식을 주는 사례 개발

○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통한 우회적 관계 개선 추구

- 한중, 한러 관계 강화를 통해 KADIZ 침범 등 불필요한 갈등 요소 축소
- 비핵화 진전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과 관련된 협의 필요. 러시아는 미국과 핵폐기를 협상하고 실천한 유일한 국가이며 한반도에 대해 실용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 중국은 대북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로서 비핵화 프로세스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에 편승한 외교정책은 한국의 국익에 장애 요소
 - 한국의 외교 원칙을 재정비하고, 단기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외교적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외교전략 수립 필요
 - 특정 이슈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혹은 미국과 북한에게 동일한 메시지 발신
 - 남북관계의 부침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대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전략 등을 구체화
 - 한국 대외전략에서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북한의 입장이 중요해지는 상황을 타개

- 한반도문제의 초당적 협력 체제 구축 필요
 - '신한반도체제' 구축의 전략적 방향과 주요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제로 정책결정력이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예: (가칭)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사회적 대화위원회) 신설
 - 현 정부가 대북정책의 수립에 있어 공감대 형성과정이 진영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발전적으로 수용, 새로운 '좌우합작'의 노력 강화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KINU Insight 19-08

발 행 일 2019년 10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편 집 인 기획조정실 연구관리팀

홈 페이지 <http://www.kinu.or.kr>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 통일연구원, 2019